낙농육우인이 단결 못하면 스스로 자멸한다는 교훈 새겨야

김 인 식
본회 조직지도부장

올 한해를 마감하면서 우리 낙농육우산업에 있어 얻은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긴 시간 고민하게 되었다. 드디어 올것이 왔다는 느낌으로 큰 사건들을 맞이한 기분이었고, 과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할지에 대해 해답이 간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려했던 수입개방 현실이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별것도 아니구나 하는 자신감이 이는 때가 있었던가 하면 과연 우리 낙농육우산업이 존립할 수 있을지의 여부마저 확신을 가질 수 없었던 때도 있었던 것이다.

UR협상을 두고 참으로 많은 용어를 반복하면서 우려반 안도반 시간을 지내왔지만 세월의 흐름에 그 충격도 차츰 엷어져 가는 느낌이다. 올해가 WTO협상 원년으로서 한우는 냉장육수입 결정으로 소위 경쟁가능성의 시험대에 드디어 오르게 되었다. 대내적으로는 한우조합 결성을 형식상 가능토록 하여 언듯 한우 생존대응책이 마련되었다는 기분마저 들게 한다.

낙농은 배합사료가격의 연이은 인상과 물가등을 들어 원유가가 낙농가 요구는 못미치지만 인상되었고, 부가세영세율이 부업농만 적용되는 터에 실망을 자아내게 하였다. 이어 터져나온 고름우유 논쟁과 잔류물질 검출 파문은 소비자로 하여금 우유를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틈에 호주산 멸균유가 수입 시판되게 되었다. 행정관료의 잘못으로 결정된 종우의 수입은 문제속에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가 고안한 소의 이표 부착이 개시되었다. 수년을 끌어 온 낙진법개정은 또 다시 소수의 반대의견을 이유로 유보되고 있고, 낙농가들의 이해대립속에 논쟁만 가열되고 있다.

한우조합의 결성 법령 마련

축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한우조합 설립이 가능토록 하였다. 한우의 존립을 위해 한우농가들의 조합결성이 무엇보다 우선과제라고 협회가 주장한지 3년만에 이루어진 성과이다. 한우가 축산업의 기본 축종이면서도 조합설립만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가 끈질긴 주장과 요구에 못이겨 그것도 행정쇄신위의결정에 마지못해 취해진 법개정이다.

문제는 한우조합이 결성되도록 축협법 시행령개정이 되었다고 하여 우리가 제시한 한우의 장기적 생존대책이 되느냐이다. 한우조합은 한우사육농가이면 가급적 특별한 제한없이 조합원으로 가입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한우, 젖소,

돼지, 닭 중 유일하게 한우만 부업으로 남아 있고 지금까지 한우를 길러온 농가의 관행이나 특징으로 볼 때 호당 4두 남짓한 사육규모 수준에서 제한을 둔다는 것은 조합결성을 사실상 막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숫소 20두이상, 암소 10두이상 규모로 하여 200명 이상이어야 하는 조합결성 요건을 제정하였다. 여러 시군을 포함한 광역단위 조합결성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시행령을 제정한 농림수산부에서는 공청회를 거쳤다는 주장으로 항변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공청회는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본다. 우선, 농림수산부가 주관한 공청회였고 토론 대상자도 전국 농가를 대변하는 협회나 몇십명을 대표하는 육우회나 같은 크기의 소리로 취급하였거니와 농림수산부가 일방적으로 지정한 토론자였기 때문이다. 물론 내면적으로 축협중앙회가 반대하였기 때문에 가급적 축협의 입장을 외면할 수 없었음은 이해가지 않는바는 아니다. 그러나 한우조합의 결성취지가 형식적인 조합 결성 명분 그자체가 아닌 이상 정부는 조속히 시행령을 재개정해야 한다.

한우조합의 결성목적은 한우농가 스스로 조합을 결성하여 생산, 출하, 유통, 가공, 판매를 직접 관장함으로써 **수입냉장육과** 경쟁하자는 것이다. 지역별로 한우조합을 결성하여 지역한우 고유 상표나 특성을 과시하면서 지자체 시대추세에 맞게 힘을 모아 스스로 한우홍보와 판매에 매진하고 육질 개선을 도모해 대응하자는 것이 취지이다. 그렇다면 굳이 사육두수를 상향조정 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만약 대부분의 축협조합원이 한우사육농가이기 때문에 한우조합 결성으로 기존 축협의 와해를 걱정한데서 비롯되었다면 하루빨리 한우조합으로 간판을 바꾸어야 한다. 한우조합원이 대부분이라면 한우조합으로 간판을 바꾸도록 하고 일부의 기타 축종조합원은 광역단위로 통합하여 조속히 축종별 전문조합이 결성되도록 추진해야 한다. 그 길만이 협동조합이 제기능을 발휘하며 개방시대에 살아날 수 있고, 전문화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기를 수 있는 대응책이기 때문이다. 한우조합 결성이 한우를 존속시키고 한우농가를 보호하는 근본대책임을 외면하면 할수록 수입냉장육이 본격 유통되고 완전쇠고기 개방단계에 이를 때 후회를 크게 하게 될것이다. 마지못해 형식적 조합결성 조문을 만들어 사실상 결성을 억제하여 생겨난 후일의 결과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의 책임성이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한우가격이 기대이상으로 높은 수준에서 안정세를 유지하여 한우농가들이 별관심의 대상이 아니지만 경기가 반전되면 분위기는 전혀 달라질 수 있다. 한우의 불황이 닥쳐 근본대책을 논의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한우조합이 대안일 것이기 때문이다.

냉장수입쇠고기 유통허용

진공포장 수입쇠고기의 유통기한은 미국 요구대로 90일로 연장되었고, '96년 7월부터 유통기한도 자율화 하는 내용의 한미간의 유통협상이 타결되었다. 이로써 자의건 타의건 국내에 미국등의 냉장쇠고기가 버젓이 유통되게 된 것이다.

한우조합의 결성목적은 한우농가 스스로 조합을 결성하여 생산, 출하, 유통, 가공, 판매를 직접 관장함으로써 수입냉장육과 경쟁하자는 것이다. 지역별로 한우조합을 결성하여 지역한우 고유 상표나 특성을 과시하면서 지자체 시대추세에 맞게 힘을 모아 스스로 한우홍보와 판매에 매진하고 육질 개선을 도모해 대응하자는 것

국내산 쇠고기가 냉동육인데 반해 소비자의 요구를 한층 더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수입쇠고기가 냉장유통될 경우 우리 한우와의 경쟁에 있어 과연 가능성이 있느냐가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 한우만을 우려한다는 것은 젖소는 아예 가능성이 없다는 전제나 다름없다. 대다수 의견이 비관적인 전망이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국내 쇠고기가 냉동유통체제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 정육점의 오랜 관행상 한우나

젖소, 수입쇠고기와의 구분 판매조차 이루어지지 않고있는 전 근대적 구조때문일 것이다. 냉장육과 냉동육과의 맛차이가 뚜렷하고 냉장육에 대한 선호도가 훨씬 앞서 있다면 우리의 쇠고기 유통구조를 냉장체제로 조속히 전환시키는 과제가 남아 있다. 특히 기존 냉장육의 유통기한이 14일로 되어 있었으나 냉장육 자체가 별로 없어서 큰 관심거리가 되지 못하다가 미국 요구대로 90일로 연장되었기 때문에 수입 냉장육은 충분한 유통기한 동안 국내에서 운반 유통되고 판매가 가능하게 되었다.

사실 우리로서는 아직 진공포장된 냉장쇠고기가 어느 수준의 고기인지 맛보지도 못했다. 다만 국내 쇠고가 유통이 아직 소비자들에게 자신있게 제시하여 당당할 수 있는 수준이 못되는 데다가 구분 판매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젖소고기 먹고도 한우맛으로 기억하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더욱 두려운 것이다. 우리 소비자들이 신토불이를 즐겨 강조하면서도 수입산 식품에 대해 미련을 갖고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그 비근한 예가 바로 엘에이(LA) 갈비인기가 그것이다. 국내에는 냉장체계가 갖추어져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수입육은 냉장으로 공급되고 유통기한 마저 자율화되어 사실상 통제 불가능하게 된다면 한우의 장래가 불안해질 수 밖에 없다. 한우의 실질적 대책마련이 더욱 더 급해졌다.

부업 농가만의 배합사료 부가세 영세율 적용

양축가의 경영비 부담이 가장 큰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은 부업농가에만 국한되어 지난 10월부터 적용되었다. 지난해 연말에 이어 6개월 사이에 두 차례의 배합사료 가격 인상이 뒤따르자 양축가의 불안이 가중되었고 이런 시점에서 양축가들이 고대해 온 영세율 적용으로 다소나마 부담을 덜자는 것이었지만 대다수 축산인의 기대를 저버렸다. 부업농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은 지난 6월 지자체 선거를 치루기 위한 민자당의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되었다. 재경원은 계속 반대하고 선거를 치루어야 하는 당으로서는 농민요구를 외면할 수 없게 되자 절충안으로 나온 것이 우선 부업농만의 영세율 적용이었던 것 같다. 하기야 정부 홍보대로 부업 양축가 수가 절대적으로 높은 것이 사실이니 최소한 부업농에게서만은 인심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얼른 보기에는 맞을지도 모른다.

부업농가 구성도를 보면 '95년 9월 현재 한우(29두이하)가 총 52만2천호중 51만4천호로 98%이고 젖소 (19두이하)가 2만4천호중에서 약 1만2천호로 49%, 양돈 81%, 양계99%로 거의 대다수 양축가가 부업이니 돈적게 들여 인심쓰자는 발상에서 보면 그럴 듯 하다. 그러나 축산업을 이런 수치로 제시하여 홍보한다는 것 자체부터 양축가를 자극하는 일이 아닐 수없다. 양계 양돈은 이미 전·기업규모로 성장 발전했고 젖소 역시 가족노동형 전업규모로 목표를 설정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자며 정부 스스로 전업화 정책을 추진하는 터에 이에 역행하는 부업규모 발상은 큰 반감을 사고 말았다. 오히려 시행하고도 인심 잃게 된 것이다. 설령 한우농가만 부업규모에 머물러 있다지만 4-5두이하 사육농가가 영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 행정기관을 찾아다니며 확인원을 받고 구입 카드를 발급하는 일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부가세 영세율이 필요한 규모의 농가는 외면한 채 별 관심의 대상이 아닌 부업농가에 적용하는 이번 조치에 다시 한번 농정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

양축가가 축협중앙회를 규탄하는 궐기대회는 축산인 모두를 서글프게 하였다. 항의하는 낙농가도 만류하는 집행부도 오늘의 이 잘못된 현실의 타개없이는 과연 국제 경쟁력을 내세워 수입개방에서 우리 낙농이나 축산이 살아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축협중앙회장의 사과와 서약으로 불상사 없이 항의시위는 끝났지만 그동안 축협중앙회에 대한 감정들의 표출은 언제라도 재연될 수 있다는 분위기를 읽을 수 있었다.

대통령 선거 공약이니 만큼 그나마 기대할 수 있겠거니 했던 믿음이 최근 청와대 고위급 회의에서 내년 적용을 목표로 내년초 임시국회에서 거론하여 법개정 등 조치키로 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내년 봄에 총선이 있으니 어차피 총선전에야 해결되겠지만 농정공약이 정치일정에 엮어져 질질 끌다가 적용되는 전근대적인 관행이 반복된다면 농정불신은 갈수록 심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대통령 약속도 믿기 어려우니 정부의 농정홍보가 제대로 농민에게 전달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원유가 6% 인상

지난 10월 16일 부터 원유가격이 평균 6% 인상되었다. 낙농가들의 원유가 인상요구는 참으로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기대했던 수준에는 못미치지만 소폭이나마 인상되었다.

협회에서는 지난해 연말부터 배합사료가격이 일제히 오르고 올해 중순에 또다시 올라 품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배합사료업체들은 최소 10% 이상 수준을 인상하여 낙농가들은 부담이 가중되자 원유가 인상을 먼저 주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수입곡물 원료가의 대폭적인 인상과 성수대교 사건으로 인한 물류비를 이유로 가격인상의 당위성을 제시한다면 우리 낙농가는 경영비 부담분을 당연히 원유가로 지불받아야 함을 제시하였다. 지난 4월 12일 농림수산부에 일차 공문을 제출한 후 낙농가의 경영부담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원유가 인상 내지 배합사료 부가세 영세율적용 추진을 요청하여 연내 인상추진을 목표로 차근히 준비를 했었다. 그리고 축협중앙회를 수시 방문하여 낙농가의 여론동향과 경영비 부담 증가에 따른 원유가 인상요청 분위기를 전달하면서 같이 협조할 것을 요청하였었다. 제3회 이사회에서는 원유가 인상추진 소위원회를 정식 구성하고 7월 11일 16.62%의 원유가 인상안을 결정하여 농림수산부, 재경원등 관계 요로에 건의하였다. 7월 25일에는 소위원들과 도지회장들이 농림수산부를 방문하여 축산국장과의 실무적인 협의와 직접적인 건의를 하면서 부터 전국은 원유가 인상추진 열기로 가득하였다.

그런데 축산국의 긍정적 반응과는 별도로 축협중앙회의 원유생산비 조서는 오히려 매년 인하된 결과로 나타나서 낙농가의 분노를 사고 말았다. 전북도지회와 서울우유 협동조합원대표들이 축협중앙회에 다 생산비 조서 공개를 요구하면서 부터 축협중앙회에 대한 불만과 비난이 쏟아졌고 드디어는 8월 24일 전국에서 2천여명의 낙농가들이 축협중앙회를 항의 방문하게 되었다. 축협중앙회의 생산비가 매년 낮게 나온 경위를 요구하는가 하면 농가대표들이 방문하였을 때는 낙농가 요구를 수렴하여 건의하겠다던 약속을 믿었는데 알고보니 속았다며 억눌린 감정들을 폭발시키고 말았다. 물론 험악한 분위기속에서 축협 사상 처음으로 양축가가 축협 중앙회를 규탄하는 궐기대회는 축산인 모두를 서글프게 하였다. 항의하는 낙농가도 만류하는 집행부도 오늘의 이 잘못된 현실의 타개없이는 과연 국제 경쟁력을 내세워 수입개방에서 우리 낙농이나 축산이 살아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축협중앙회장의 사과와 서약으로 불상사 없이 항의시위는 끝났지만 그동안 축협중앙회에 대한 감정들의 표출은 언제라도 재연될 수 있다는 분위기를 읽을 수 있었다.

축산국장을 비롯한 농림수산부 관계관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 재경원을 설득하는 끈질긴 신경전이 한달반이나 지속되었고, 매일 초조한 심정으로 재경원과의 대화에 주력하게 되었다. 재경원 장관의 긍정적인 답변이 있는 자리에서 조차 재경원 실무자는 축협생산비 조서를 근거로 원유가 인상에 계속 소극적으로 나왔다. 낙농가의 요구에는 미흡하지만 6% 인상이 결정된 것이다. 이번 인상의 특징은 1급A를 신설하여 ml당 세균수 3만마리 미만에는 kg당 466원으로 정한 것이다.

우유의 고름논쟁과 잔류물질 파동

우유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극도에 달하여 전국 우유소비가 20% 정도 감소되었다. 업체에 따라서는 60% 전후까지 소비 감소현상이 나타났으니 한국낙농사상 최악의 사태임에 틀림없다.

이번 우유논쟁은 처음 MBC 카메라출동 보도로 인한 고름 논쟁이 한달간 지속되다가 다소 진정기미를 보이려 하자 보건복지부의 잔류

대다수농가가 깨끗한 우유생산에 전념하고 있지만, 그 일부가 늘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세균수, 체세포수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될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해야 한다. 이번 사태로 우리 위생수준과 선진국 수준이 비교되었고 소비자는 선진국 기준을 요구하고 있음을 주목하게 되는 것이다. 식품 규제나 기준은 국민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지만 우리 낙농가의 애로사항을 노출시키는 것보다 소비자 요구가 우선임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 잔류물질에 대해서도 평소 이상 관심기울일 과제가 되었다.

물질 검출 결과 보도로 인한 항생 항균제 논쟁이 다시 일어 업친데 덥친격이 되어 버렸다.

당초 고름논쟁은 체세포를 고름이라고 잘못 표현한데서 야기되었고, 이를 악용한 파스퇴르유업의 선전공세와 이에 대응한 한국유가공협회간의 광고공방전으로 소비자들의 외면을 사게 되었다. 지난 10월 22일 저녁 MBC 저녁 9시 뉴스시간 카메라 출동 프로에 체세포 75만이상의 등외급 우유가 소비자가 먹는 우유속에 그대로 들어가게 되고, 유방염에 걸린 젖소의 우유역시 시판되는 등 고름섞인 우유가 일부 유업체를 제외하고는 판매되고 있다는 너무도 충격적인 고발 뉴스를 보도하면서 부터이다.

사실여부를 떠나 TV 매체의 위력은 국민 모두를 경악케하였고, 바로 뒷날부터 우유를 믿고 마시던 대다수 소비자들은 과연 우유를 안심하고 마셔도되는지 여부를 몰라 어리둥절하게 되었다. 그러나 고름논쟁이란 당초 부터 있을 수 없는 발상임에도 이 보도를 계기로 낙농업계는 또다시 논쟁시비에 휩싸이게 되었다. 바로 지난 10월 24일 모든 일간 신문에 일제히 파스퇴르가 광고를 게재하였는데, 그 내용 역시 우리는 고름우유를 팔지 않는다고 하며 MBC에서 일부 유업체라고 지칭한 업체가 파스퇴르유업이며 기존 우유와 달리 파스퇴르우유만은 고름이 아니라고 선전에 열을 올리게 되었다.

이에 소비자의 판단이 흐려질 수 밖에 없었고, 역시 우유에 고름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파스퇴르만은 없다는 인상이 주어지자 시중의 우유소비가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일제히 반품소동과 학교우유 급식거부, 소비자의 언론에 문의 사태등 모든 신문과 방송들이 우유의 고름 시비로 가득했다. 신문마다 광고를 했으니 대다수 국민이 최소한 하루에 몇번씩은 광고에 눈이 쏠리게 될 수 밖에 없었다. 협회에서는 담당 취재기자와 책임자를 만나는 등 MBC에 대응하게 되었고 긴급 이사회를 통해 파스퇴르 항의와 함께 대응책을 논의하여 소비자와 언론에의 호소등 문제를 최소화 하려는데 주력하게 되었다. 그러나 유업체들이 파스퇴르 광고에 격분하여 파스퇴르도 체세포가 수백만이 있는 우유를 시판한다는 입증자료를 한국유가공협회 명의로 신문 전면에 광고로 게재하고 파스퇴르 우유는 고름덩어리라는 식의 표현으로 맞불 작전에 나서게 되었다. 파스퇴르의 비난을 광고하고, 파스퇴르는 다시 유가공협회를 비난하는 등 업체들의 신문광고전은 참으로 희한한 광경을 연출하였다

우유를 고름 논쟁 도마에 올려 소비자들의 혐오감을 유발시켜 우유를 외면케 하면서 서로 맞대응 광고로 싸우는 행위에 국민 모두가 진저리를 치고 말았다. 마침 노태우 전대통령의 비자금 파문으로 나라안이 온통 벌집 쑤신 듯 소란스러운 때이면서도 고름논쟁 광고전 때문에 신문 광고란 혹은 일간지에 따라서는 전면 칼러 광고가 도배질을 하여 우유가 안심하고 먹기 어려운 식품인양 유업체 스스로 선전 홍보하는 추태를 보이고 말았다.

협회에서는 성명을 발표하여 즉각적인 광고 중단과 상호 자제를 요청하였고 각 방송사, 신문사, 소비자단체 등에 우유의 진실성을 이해하여 올바른 인식을 소비자가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었다. TV방송사 역시 경쟁적인 우유 논쟁프로그램을 편성하게 되었고 소비자들은 고름논쟁의 발단이나 내용, 진실성에 대해 차츰 이해하는 편이 되었다. 한국 낙농 역사에서 국민에게 우유를 알리는 가장 저질스러운 충격적인 방법이 총동원된 느낌이다. 대다수 언론들이 체세포를 고름으로 잘못 표현한데서 비롯된 논쟁이고 업체

간의 잘못된 비방논쟁광고가 문제를 확대했다는 결론으로 나아가자 소비자들도 차츰 이해하는 것 같아 보였다. 그러나 우유소비는 갈수록 줄어들게 되었고 소비자들은 우유를 마시면서도 늘 떨떠름하다는 것이 대다수의 반응이었다. 이에 파스퇴르와 유가공협회간의 합의가 이루어져 상호 비방을 중단하자며 소비자에게 사과광고를 게재하였고, 문제를 더이상 확대하지 않으려는 표현이 일간지에 보도되었다. 낙농가의 격분한 감정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고 더이상 가면 낙농업은 자멸하고 만다는 자정요청의 소리가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소비자의 감정을 건드려서는 안된다는 판단으로 11월 21일 우리협회는 전국 낙농가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더욱 좋은 우유생산 낙농가 결의대회를 전경련에서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하루전인 11월 20일 보건복지부는 시중 우유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 결과를 발표하였고, 서주, 연세, 동서, 삼양, 두산의 우유에서 항균제 잔류물질이 그리고 동서우유에서는 항생제가 발견되었다는 발표를 하자 우유논쟁이 이제 잔류물질 파문으로 다시 옮겨지게 되었다. 잔류물질에 대한 허용기준치가 없는 우리로서는 이번 검사결과를 국민에게 안심시키기 위해서 미국, 카나다, 유럽의 예를 들어 극미량이 들어 있다는 발표 내용이었음에도 언론들은 일제히 우유를 마셔도 되는지의 의문표를 달고 있자, 문제는 좀처럼 진행되지 않았다.

협회에서는 보건복지부 담당자의 즉각적인 파면조치와 함께 소비홍보 대책마련을 요청하는 강력한 성명발표등으로 대응하는 한편 TV, 라디오등 방송과 각일간지 등에 우유소비 홍보 프로그램 제작을 요청하였고 소비자단체등에 협조요청등 국면전환에 총력을 기울였다. 다행히 방송이나 언론이 협조적이었고 다소간 진정국면으로 찾아드는 느낌이다. 그러나 자체 광고선전 능력이 없은 중소규모 유업체나, 낙협우유의 경우 절반이상의 소비감소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잔류검출 5개 업체는 말할 것도 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몇가지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로, 좋은 우유를 생산해야 하는 우리 낙농가의 책임이 더욱 무거워졌다는 점이다. 물론 일부의 사례이고 대다수농가가 깨끗한 우유생산에 전념하고 있지만, 그 일부가 늘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세균수, 체세포수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될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해야 한다. 이번 사태로 우리 위생수준과 선진국 수준이 비교되었고 소비자는 선진국 기준을 요구하고 있음을 주목하게 되는 것이다. 식품 규제나 기준은 국민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지만 우리 낙농가의 애로사항을 노출시키는 것보다 소비자 요구가 우선임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 잔류물질에 대해서도 평소 이상 관심기울일 과제가 되었다.

둘째로, 정부의 기준 강화 및 제정이 불가피해졌다. 세균수 등외급의 상향조정과 체세포수 등급의 가격적용 및 등외급 상향조정은 이미 소비자 입에서 터져나왔고 언론에서 지적이 앞서가고 있다. 또 국내 잔류물질 허용기준이 없으므로 기준제정이 불가피해졌다. 또 원유에 대한 TTC검사가 양성이냐 음성이냐에 그쳤지만 잔류량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TTC 이외의 다른 기기도입이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세째로, 유업체의 우유소비홍보를 통한 대책마련에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발단이 된 MBC보도에 출연하는 고름 논쟁 근거를 만든 사람들도 유업체 집유담당 직원들이었고, 파스퇴르와의 광고 싸움

원유단계는 농림수산부가 관장하고, 집유장 이후의 가공단계의 제반업무는 보건복지부가 담당한다. 이번 잔류물질검사도 소비자 단계인 시중 시유를 검사했으니 보건복지부가 맡아서 조사발표하였고, 파문이 일자 수습책하나 없이 수수방관이다. 만약 농림수산부가 맡았다면 이런 파문이나 결과는 막거나 최소화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발표 결과에 따른 파문을 생각해서 협의과정을 거치거나 혹은 대책이 우선되었을 것이다. 이번을 계기로 반드시 가공업무는 농림수산부로 일원화되어야 한다.

도 유업체가 주도하여 실망과 충격을 던져주었기 때문이다. 평소 우유의 영양적가치나 위생적 측면을 소개하는 광고가 있었던 들 고름우유 논쟁은 소비자의 상식에서 벗어난 해프닝이 될 수도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자사제품 선전에는 수십억원의 광고비를 투자하면서도 공동홍보 광고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다. 오히려 이번 기회를 이용해 멸균유 수입에 열을 올리는 업체도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유소비 홍보는 결국 우리 낙농가 몫이 될 수 밖에 없다. 낙농가 스스로 나서서 우유를 알리고 선전하는 홍보활동을 해야 한다. 그 길만이 시유를 지키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자조금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돈을 만드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네째로, 유가공업무가 농림수산부로 일원화되어야 한다.

원유단계는 농림수산부가 관장하고, 집유장 이후의 가공단계의 제반업무는 보건복지부가 담당한다. 이번 잔류물질검사도 소비자 단계인 시중 시유를 검사했으니 보건복지부가 맡아서 조사발표하였고, 파문이 일자 수습책하나 없이 수수방관어다. 만약 농림수산부가 맡았다면 이런 파문이나 결과는 막거나 최소화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발표결과에 따른 파문을 생각해서 협의과정을 거치거나 혹은 대책이 우선되었을 것이다. 이번을 계기로 반드시 가공업무는 농림수산부로 일원화되어야 한다.

호주산 멸균유 수입 시판

호주산 멸균유가 수입 시판되고 있다. 그동안 걱정했던 일이지만 국내 유업체에서 수입해다 팔 줄은 미처 짐작하지 못했을 것이다. 신자연음료(주)를 회사를 만들어 호주산 멸균유 1리터 팩을 들여와 한국에서 안내 스티커를 붙여 1,500원씩에 판매하고 있다. 서주 우유대리점 100개를 통해 판매하고 있고, 서주우유 대표 친인척이 맡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내 낙농이 소비자의 판단혼란으로 어려움을 겪자 이를 악용한 상술행위는 참으로 영악스럽고 파렴치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고름시비, 잔류물질 시비로 국내산 우유가 문제있는 양 비치는 틈을 이용해 호주산 멸균유 시판행위는 낙농가의 분노와 배신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특히 우유에 대해 잘아는 인사이고 유업계에 몸담았던 전문가가 이런 짓을 한다는데 더욱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국민들이 신선한 시유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멸균유에 냉담해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나 그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일 수 있다. 이번수입의 사업실적이나 경영성과를 바탕으로 타 유업체가 진입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선전광고를 대대적으로 했을 때 나타날 결과에 대해 안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선진 낙농국 우유인 점을 내세워 홍보 효과를 노린다면 예측이 달라질 수 있다. 국내 우유시장 침체 분위기나 수지타산을 계산하여 영업전략을 수입산으로 돌리게 될 개연성 마저 배제하기 어렵다.

또 다른 우려는 환원유의 시판 가능성 문제다. 멸균유가 호주에서는 6~10개월 보관이지만, 국내 규정 때문에 7주로 유통하게 되면서 가능성이 타진되어 환원유 시판 행위가 가세할 경우 또 다른 불안으로 번질 수 있다.

수입 유제품은 이제 봇물처럼 쏟아지고 우유는 남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도적인 개선대책 마련을 외면하는 사안에 대해 우리 낙농가들은 직시해야 한다. 정치논리는 정치적 심판으로 대응해야 한다면 내년 총선에 바른 선택이 있어야 한다. 이제 낙농가도 더이상 분열하면 자멸한다는 교훈을 스스로 새겨야 할 것이다. 낙농가 수는 줄고 결집력은 약하고 찬반 양론에 시간을 소모하게 된다면 조만간 후회가 뒤따를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낙농진흥법 개정 유보

낙농진흥법 개정이 민자당의 유보결정으로 현재까지는 무산되는 분위기이다. 민자당은 그동안 낙진법개정을 적극 추진하려는 입장으로 농림수산부와의 당정회의를 거쳐 일부 반대의견이 있는 내용을 수렴하는 수정안까지 확정한 상태에서 유보 결정하였다. 우선 집권

여당이 행정부안을 그것도 당정회의 합의사항을 외면하였다는데 충격적이다. 철저한 당리 당략때문으로 풀이된다. 낙농가의 10년 숙원과제로 때로는 건의하고 호소하고 애원하다시피한 사안이 민자당의 유보 결정으로 끝나게 된 것이다. 낙진법 개정 반대가 일부 지역 일부 낙농가의 강한 목소리 때문이고 또 소수의 횡포라고 한다면, 야당의 강한 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다수당이 횡포를 발휘하고 있어 대다수 낙농가의 분노를 사고 있다. 민자당 입장에서 보면 반대 의원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으니 내년 총선에서, 한자리라도 잃지 않기 위해서 부득이한 방법이라고 이해될 수 있고 동정가는 점도 있다. 민자당 특정의원 한사람 살리기 위해 낙농가가 희생당해도 된다는 논리라면 횡포가 아닐 수 없고, 낙농가를 철저히 무시한 처사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개정을 요구하는 낙농가 입장에서도 적극성을 발휘해야 할 과제를 부여받은 셈이다. 민자당이 특정의원 지키기 위해서라면 개정을 요구하는 낙농가들은 개정을 외면하는 의원들을 심판하려는 힘이 약하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유파동으로 나라안이 온통 시끄럽고, 유업체는 수입 멸균유를 들여와 판매하는 등 낙농이 일대 위기를 예고하고 있음에도 낙농제도 개선을 통한 법개정조차 집권여당이 외면하고 있으니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약 민자당의 계산대로 내년 총선에 이용된다면 낙농가들의 무기력을 입증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낙진법 개정안의 내용이나 찬반 양론에 대한 평가는 더이상 언급않는 것이 오히려 마음 편할 것 같아 생략코자 한다. 수입 유제품은 이제 봇물처럼 쏟아지고 우유는 남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도적인 개선대책 마련을 외면하는 사안에 대해 우리 낙농가들은 직시해야 한다. 정치논리는 정치적 심판으로 대응해야 한다면 내년 총선에 바른 선택이 있어야 한다.

이제 낙농가도 더이상 분열하면 자멸한다는 교훈을 스스로 새겨야 할 것이다. 낙농가 수는 줄고 결집력은 약하고 찬반 양론에 시간을 소모하게 된다면 조만간 후회가 뒤따를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협회비 납부하여 우리의 책임을 다 합시다

협회에서는 낙농육우농가의 권익보호를 위한 대변활동에 앞장서고 있고, 최선의 노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소 우리의 요구에 미흡하긴 하지만 원유가 인상조치를 비롯하여 유질파동을 적극적이고 강력히 대처하는 한편 농가의 유질향상을 위해 원유위생 교육 강습회를 실시하였으며 수입개방에 대응한 각종 정책마련 등의 활동으로 농민단체중 가장 강력한 권익대변활동에 임직원 모두가 매진하고 있습니다.
협회의 활동이 뒷받침되기 위해서는 협회의 재정안정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아직 미납된 협회비를 조속히 납부하셔서 차질없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95년 12월까지 미납한 회원은 협회의 자금사정상 월간 낙농육우 발송이 중단됨을 알립니다.

회비납부구좌 : 농협 087-01-052173 예금주 : 한국낙농육우협회
축협 051-11-10355-016 예금주 : 한국낙농육우협회

사단법인 한국낙농육우협회장